

환경규제가 동남권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노경완 책임연구원(bnk1021111@bnkfg.com)
백충기 연구위원(cgbaek@bnkfg.com)

기후변화 대응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세계 각국은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철강산업은 국내 제조업중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아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권 철강산업은 사업체 및 종사자 비중이 경제권역중 가장 높아 우려되는 상황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이 시행된 가운데 탄소세·탄소국경세 도입 등 추가 규제도 예상되어 부담을 더욱 높일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환경규제에 대응한 미래투자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주요 하방리스크 요인이다.

기후변화 대응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이다. 기업경영의 화두로 ESG가 부각되는 만큼 기업 스스로도 환경규제를 부담요인이 아닌 경쟁력 강화의 기회요인으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정부 및 지자체도 국내외 환경규제 종합정보서비스 구축,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 마련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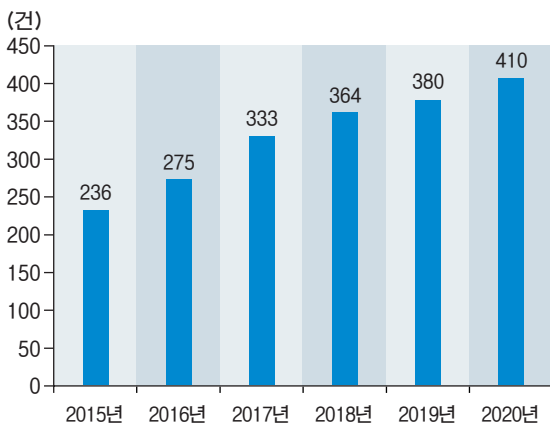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흐름

기후변화 대응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은 환경규제 등 친환경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WTO에 따르면 글로벌 환경규제 건수¹⁾는 2015년 236건에서 2020년 410건으로 연평균 11.7%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현황을 살펴보면 EU는 유럽 그린딜²⁾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³⁾을 선언하고 실행전략을 발표하는 등 환경정책 마련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함께 파리기후협약⁴⁾에 복귀하고 온실가스 배출 제한 등 기후위기 대응관련 기술개발을 포함한 인프라 투자계획(American Jobs Plan)을 발표하는 등 대응력을 높여 나가는 모습이다.

중국, 일본도 환경정책 강화에 힘쓰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처음으로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밝혔다. 일본도 탄소중립 실현기한을 2050년으로 설정하고 해상풍력·수소·자동차 등 14대 분야 그린성장전략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 환경규제 건수 추이



자료 : WTO

주요국 환경정책 동향

구분	내용
유로	· 신성장전략 유럽그린딜 채택 · 2023년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
미국	· 파리기후협약 복귀 · 탄소국경세 검토 공식화 · 기후위기 대응관련 기술 개발 등 인프라 투자계획 발표
중국	· 친환경 자동차 · 신재생에너지 확대 · 탄소배출권거래제 전국적 시행
일본	· 해상풍력 · 수소 · 자동차 등 14대 분야 그린성장전략 발표

자료 : 한국무역협회

1)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활용한 환경규제 기준
 2) 2019년 발표된 유럽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이자 지속가능성장 위한 경제정책
 3)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도록 만들어 더 이상 온실가스가 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함. 우리나라도 지난해 9월 탄소중립을 선언
 4) 2015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채택한 조약.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9년 자국에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탈퇴했으나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복귀(202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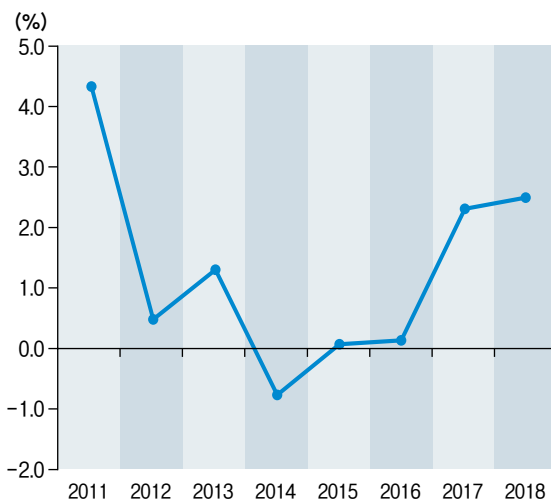
철강산업, 환경규제에 따른 부담 가장 클 것으로 예상

우리나라는 2014년을 기점으로 온실가스 배출량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흐름을 감안할 때 이와같은 배출량 증가세는 국내 산업 전반의 비용 부담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석탄발전 비중⁶⁾이 높고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 중심의 주력산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더욱 우려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대표적 에너지 집약산업인 철강산업이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보면 철강산업이 국내 제조업종 3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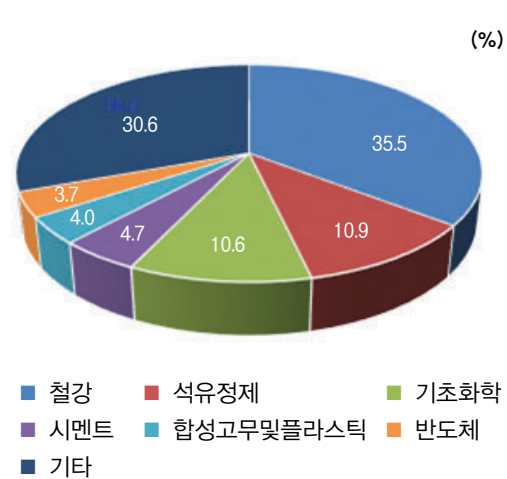
철강산업을 제외하면 석유정제(10.9%)와 기초화학(10.6%)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업종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시멘트(4.7%),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4.0%), 반도체(3.7%)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률



자료 : 환경부

국내 제조업종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



주 : 1) 2018년 기준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2) 표준산업분류 소분류 기준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5) 연도별 총배출량(백만톤) : 691.9(2014년) → 692.5(2015년) → 693.5(2016년) → 709.7(2017년) → 727.6(2018년)

6) 에너지원별 발전량(2019년) : 석탄(40.4%), 원자력(25.9%), 액화천연가스(25.6%), 신재생(6.0%), 기타(2.1%)

7) 특히 에너지 소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뿐만 아니라 철광석을 녹여 선철을 추출하는 제선공정에서 환원제로 코크스가 사용되어 필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산업

동남권, 철강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비중 높아 더욱 우려

동남권은 전국 철강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경제권역인만큼 환경규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종사자수(2019년) 기준 동남권 비중은 25.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경권(22.0%), 충청권(18.0%), 수도권(17.9%), 호남권(15.9%), 강원권(0.6%) 순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체수 비중도 동남권이 전국의 31.5%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수도권(31.2%), 대경권(14.3%), 충청권(12.6%), 호남권(9.8%), 강원권(0.5%)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가가치 측면⁸⁾에서는 17.6%로 대경권(34.3%)과 호남권(30.8%)에 이어 3위에 그치고 있다. 이는 대경권과 호남권이 포스코 및 현대제철 등 규모가 큰 상공정(제선·제강) 철강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반면 동남권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하공정(압연) 업체 비중이 높은 것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된다.

경제권역별 철강산업 종사자수 비중

(명, %)

경제권역	종사자수	비중
동남권	23,524	25.7
대경권	20,180	22.0
충청권	16,508	18.0
수도권	16,423	17.9
호남권	14,547	15.9
강원권	518	0.6
합계	91,700	100.0

주 : 1) 제조업 종사자수 10인 이상 기업
 2) 2019년 1차 철강제조업 기준
 자료 : 통계청

경제권역별 철강산업 사업체수 비중

(개, %)

경제권역	사업체수	비중
동남권	558	31.5
수도권	554	31.2
대경권	254	14.3
충청권	224	12.6
호남권	174	9.8
강원권	9	0.5
합계	1,773	100.0

주 : 1) 제조업 종사자수 10인 이상 기업
 2) 2019년 1차 철강제조업 기준
 자료 : 통계청

8) 경제권역별 철강산업 부가가치 비중(%), 2019년 기준)

· 1위 대경권(34.3), 2위 호남권(30.8), 3위 동남권(17.6), 4위 수도권(10.8), 5위 충청권(6.1), 6위 강원권(0.4)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는 지역 철강산업 수출의 제약요인으로도 지목된다. 특히 환경규제 강화에 속도를 높이는 대표 지역인 미국, EU, 중국, 일본 4개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상승하고 있어 더욱 우려된다.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 비중은 2016년 31.0%에서 2019년 48.6%까지 17.6%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동남권 최대 철강 수출대상국은 지역 철강 총수출의 13.8%(2019년 기준)를 차지하는 일본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미국이 12.5%로 2위를 차지했으며 EU는 11.3%, 중국은 11.0%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건설, 조선, 가전 등에 사용되는 아연도강판·기타철구조물·주강·강선·강관 수출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연도강판은 동남권 철강 수출의 18.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기타철구조물(12.9%), 주강(12.1%), 강선(11.1%), 강관(8.5%)의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남권 철강 수출 대상국 및 비중

(%, %p)

국가	2016년	2019년	증감
일본	7.3	13.8	6.5
미국	8.1	12.5	4.4
EU	7.8	11.3	3.5
중국	7.8	11.0	3.2
4개국 합계	31.0	48.6	17.6

주 : 1) 수출금액 기준
 2) MTI 2단위 철강제품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동남권 철강 수출 품목 및 비중

(%)

품목	비중	전방산업
아연도강판	18.4	자동차, 가전 등
기타철구조물	12.9	건설, 조선 등
주강	12.1	조선, 자동차 등
강선	11.1	조선 등
강관	8.5	건축구조용 등
기타	37.0	-
합계	100.0	-

주 : 1) 2019년 수출금액 기준
 2) MTI 2단위 철강제품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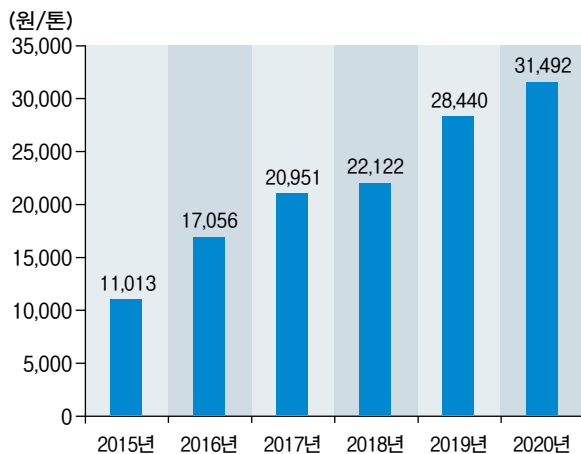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탄소국경세, 탄소세 등의 추가 규제 지역 철강업계 부담을 더욱 높일 전망

국내의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 철강업계의 어려움은 가중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⁹⁾ 3차 계획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탄소세 도입 논의와 함께 세계 주요국의 탄소국경세 추진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평균거래가격은 거래제가 처음 시작된 2015년 이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¹⁰⁾ 특히 올해부터 3차 계획(2021~25년) 시행으로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이 기존 3%에서 10%로 높아짐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기업을 중심으로 비용부담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철강산업은 관련법령¹¹⁾에 따라 유상할당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 할당량 초과 부분에 대한 배출권 구매 부담이 크다. 유상할당 비중 확대에 따른 배출권 가격 상승 압력 등은 철강업체의 재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평균거래가격 추이



자료 :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계획

구분	제2차 계획기간 ('18~'20년)	제3차 계획기간 ('21~'25년)
목표	· 상당 수준 감축	· 실질적 감축
제도 운영	· 거래제 범위 확대 및 목표 상향 조정 · 배출량 보고·검증 등 각종 기준 고도화	· 로드맵에 따른 배출 허용총량 설정 강화 · 시장조성자 기능 강화, 장내파생상품 도입 등 시장기능 확대
할당	· 유상할당 개시 (무상 97%, 유상 3%) · 벤치마크(BM) 할당 등 할당방식 선진화	· 유상할당 비율 확대 (무상 90%, 유상 10%) · 벤치마크(BM) 할당 방식 확대

자료 : 환경부

9)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하도록 하고 부족 또는 여분의 경우 사업장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10)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배출권 거래가격이 급락하였으나 하반기 이후 반등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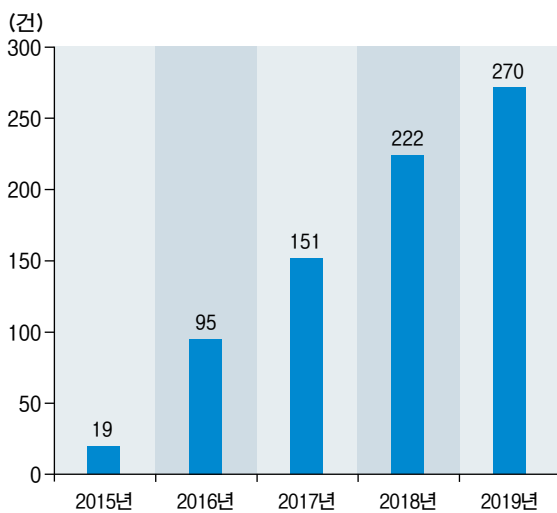
1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이와함께 탄소 배출량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 도입도 금년 3월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가 탄소 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¹²⁾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탄소세 시행시 배출량 상위 100개 기업중 최대 50개 업체는 탄소세 규모가 영업이익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 환경규제 강화와 더불어 글로벌 탄소국경세에 대한 부담도 가시화되고 있다. 탄소국경세는 이산화탄소 배출규제가 느슨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관세를 의미한다. EU가 2023년 시행을 앞두고 적용대상, 관세책정 방법 등을 최종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도 탄소국경세 검토를 공식 선언하면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주요 수출국의 탄소국경세 시행은 수출비중이 높은 철강기업을 중심으로 비용 증가를 초래할 전망이다. 글로벌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EU·미국·중국이 모두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국내 기업의 세금 부담은 2023년 6,100억원에서 2030년 1조 8,700억원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신규 환경규제 건수 추이



주 : 신규 행정규제 누적 기준
자료 : 환경부

탄소국경세 주요 도입 방식

구분	내용
관세 부과	· 탄소 함량이 높은 수입품에만 관세 부과 · 다만 가공 후 역수출하는 제품의 경우 일부 환급
탄소세 부과	· 역내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탄소세 부과 * 간접세 형태 (예: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 단, 탄소 배출량이 일정 규모 이하인 기업은 환불
탄소배출권 거래제 적용	· 수입품의 생산에 사용된 탄소 배출량에 비례하여 배출권 구입 할당량 부과

자료 : KOTRA

12) 2021.4.22일 개최된 기후정상회의에서 미국, 일본, 캐나다가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시하였으며, 한국도 연내 상향된 감축목표 제출을 공언함

동남권 철강기업, 환경규제 대응여력 낮아 우려

금년중 철강산업은 중국 철강기업 구조조정 및 감산효과, 글로벌 철강수요 확대 등으로 예상보다 강한 반등이 기대된다.¹³⁾ 세계철강협회는 금년중 철강수요가 전년대비 5.8%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 및 수출¹⁴⁾ 감소세 지속 등으로 활력이 약화된 지역 철강업계는 금년중 업황 반등에도 불구하고 환경규제 대응여력은 여전히 크게 부족하다. 전망산업 기술 발전,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친환경 설비 및 R&D 투자, 인력양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미래대응을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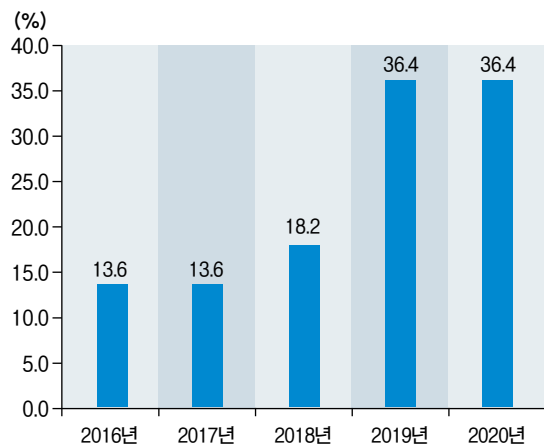
오히려 생존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지역기업도 적지 않아 우려된다. 동남권 철강산업 상장사중 영업이익 적자기업 비중은 2016년 13.6%에서 빠르게 상승하여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2020년에는 36.4%까지 높아졌다. 기업규모면에서 열위에 있는 지역 비상장기업의 경우 어려움은 더욱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남권 철강산업 생산 및 수출 증감률

구분	증감률 (%)	
	생산	수출
2016년	1.3	△ 0.4
2017년	△ 2.2	19.6
2018년	△ 2.8	△ 25.9
2019년	△ 2.5	△ 14.9
2020년	△ 5.3	△ 10.1

주 : 수출은 MTI 2단위(철강제품) 기준
 자료 :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동남권 철강기업중 영업이익 적자기업 비중



주 : 1) 표준산업분류 소분류 1차 철강업
 2) 철강 상장기업 기준
 자료 : 각 사업보고서

13) 금년 1분기중 포스코의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20.1% 상승한 1조 5,524억원 기록. 현대제철도 지난해 1분기중 적자를 기록했으나 금년에는 3,039억원을 기록하며 큰 폭의 반등세 시현

14) 동남권 철강산업 수출금액(백만달러) : 7,647(2016년) → 9,144(2017년) → 6,779(2018년) → 5,771(2019년)

철강 산업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핀셋 지원 필요

동남권 철강산업은 활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업황 전반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적자기업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환경규제라는 새로운 장벽은 지역 철강산업 생태계 자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엇보다 지자체, 유관기관의 적극적 금융지원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판단된다.

이와함께 중장기적 관점에서 환경규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 스스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경영의 새로운 화두로 ESG¹⁵⁾가 부각되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탄소배출이 많은 철강업계 입장에서는 업계 생존 자체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상당수 지역 철강업체는 투자여력이 부족한 만큼 핀셋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기업이 환경규제 대응과정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규제파악과 비용부담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지역 철강기업이 국내외 환경규제 변화, 수출대상국 환경 정책, 환율 영향 등을 실시간으로 획득하고 전문가 컨설팅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국내외 환경규제는 신설·개정 등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주요국별 적용 시기나 방식도 달라 중소기업이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자금지원과 함께 인센티브 체계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저탄소 설비 구축, 친환경 신기술 개발 등 미래투자에 나서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성과와 연동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철강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환경규제가 부담요인이 아닌 경쟁력 강화의 기회요인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힘써야 할 것이다.

15)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보여주는 지표

[참고] 국내 주요 환경규제 정책 동향

■ 국내 환경규제 관련법령 및 내용

법령	내용
대기환경보전법	1. 대상 : 전국 일반 배출사업장(약 5만7천개) 2. 내용 ○ 대기배출 부과금 대상 대기오염물질 확대 - 대기배출 부과금 대상에 '질소산화물' 추가 - 시행일 : 2020.01.01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 대기오염물질 전체 평균 30% 강화 - 시행일 : 2020.01.0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1. 대상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799개) 2. 기간 : 5년(2020년~24년) 3. 내용 ○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할당 총량관리제 권역 확대 - 변경전(1개 권역 : 수도권) → 변경후(4개 권역 :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 할당결과 2019년 배출량 대비 2024년 질소산화물(39.7%), 황산화물(37.7%) 저감 추진 - 시행일 : 2020.04.03 ○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 굴뚝 자동측정기 부착 의무화 - 시행일 : 2020.04.03
화학물질관리법	1. 대상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 2. 내용 ○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후 5년간의 유예기간(2015년~19년) 종료 및 전면시행(2020.01.01)에 따른 안전기준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1. 대상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2. 기간 : 제3차 계획기간(2021년~25년) 3. 내용 : 유상할당 비율 증가(할당량의 3% → 10%)

자료 : 법제처

■ 주요 환경 부과금 및 분담금 현황

종류	법령
기본 배출 부과금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처분 분담금	자원순환기본법
재활용부과금 / 폐기물부담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책임보험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대기총량초과 과징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화학물질관리법
온실가스 배출권 미제출량 과징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자료 : 한국무역협회

[참고문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유럽그린딜 추진동향 및 시사점,” 2020.10
 산업연구원, “환경규제와 철강산업,” 2019.7
 하나금융연구소, “2021년 환경관세 도입 가능성과 국내 산업 영향,” 2021.1
 한국무역협회, “주요국 탄소중립 정책과 시사점,” 2021.4
 _____, “기업현장 방문을 통한 환경규제 합리화 방안 연구,” 2019.10
 환경부,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전략,” 2020.12
 _____, “2020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2021.1
 KDB미래전략연구소, “국내 철강산업의 현황과 과제,” 2020.8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세계철강협회, www.worldsteel.org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www.gir.go.kr
 통계청, www.kostat.go.kr
 한국철강협회, www.kosa.or.kr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WTO, www.tbtimes.wto.org

BNK경제인사이드 발간목록

2017

01	동남권 아파트 가격 동향 및 전망
02	4차 산업혁명과 동남권 일자리
03	동남권 기업의 인도차이나반도 진출현황 및 시사점
04	글로벌 환율동향과 동남권 경제
05	원자재시장 동향 및 시사점
06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과제
07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동남권의 미래
08	동남권 주력산업 수출동향과 전망
09	동남권 산업생태계와 향후 과제
10	인구구조 변화와 동남권의 과제
11	2018년 동남권 경제전망

2018

01	동남권 수출과 지역경제
02	동남권 자동차 부품산업 동향과 전망
03	동남권 부동산 시장 점검
04	동남권 서비스업 고용 변화
05	동남권 뿌리산업 현황 및 시사점
06	동남권 100대 기업 변화
07	동남권 기계산업 현황 및 전망
08	동남권 철강산업 현황 및 시사점
09	최근 10년간 지역금융시장 변화 분석
10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전망
11	2019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18년 동남권 경제

2019

01	G2경제 진단 및 시사점
02	동남권 건설업 현황 및 시사점
03	동남권 자영업 현황 및 시사점

2019

04	사물인터넷 산업현황과 동남권 발전과제
05	동남권 산업단지 현황 및 발전 방안
06	동남권 강소기업 특징 및 시사점
07	2019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동남권의 일본 수출입 현황 및 시사점
09	동남권 소비동향 및 시사점
10	동남권의 아세안 교류 현황 및 발전과제
11	2020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19년 동남권 경제

2020

01	2020년 동남권 수출 여건 점검
02	동남권 관광산업 현황 및 시사점
03	동남권 주요 상권의 변화 분석
04	동남권 제조업 현황 진단
05	동남권 경공업 동향 및 시사점
06	동남권 고용구조 변화와 향후 과제
07	2020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뿌리산업 개편과 동남권 발전과제
09	동남권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
10	동남권 기계산업 동향 및 시사점
11	2021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20년 동남권 경제

2021

01	2021년 동남권 수출 전망
02	동남권 신공학과 지역경제의 미래
03	글로벌 해운시장 전망과 시사점
04	환경규제가 동남권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BNK 금융그룹
Busan N Kyongnam

언제나, 어디서나
“I'm banking!”

BNK는 새로운 금융을 만들고 있습니다



스마트하게
BANK를 바꾸다
BNK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케이뱅크 BNK 투자증권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신용정보 BNK 시스템 BNK벤처투자 BNK생명구단

BNK BNK금융지주

제2021-04호

신고번호 부산남, 라00006

신고일자 2016년 10월 14일

발행인 김지완

편집인 김성주

발행처 BNK금융지주 (www.bnkfg.com)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문현동)

연락처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

인쇄 애드벤처

2021년 4월 30일 발행

BNK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NK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